

보도시점 2025. 4. 3.(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5. 4. 3.(목)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관리 강화

- 농촌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강화로 불법 소각 방지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하여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홍보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한다.

* 'PE, PP+ 알루미늄 필름' 소재로 바람에 가볍고 가연성이 높아 산불 유발 우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위탁업체 또한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한다. 이러한 감시활동과 함께 마을회관, 지역 시장 등에서 현장 밀착형 불법소각 방지 운동(캠페인)과 교육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과 산불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인 4월 한달 동안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 계획. 끝.

| | | | | | |
|-------|---------|-----|-----|-----|--------------|
|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장 | 정호경 | 044-201-7421 |
| | 생활폐기물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우석 | 044-201-7427 |
| | 환경부 | 책임자 | 과장 | 양한나 | 044-201-6860 |
| | 대기환경정책과 | 담당자 | 주무관 | 성대용 | 044-201-7723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개 요**

- (목적)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소각을 단속하여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 차단
- (관리대상)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 **추진 내용**

- (수거) 농가, 경작지 등에 방치된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 * 폐비닐·농약병을 수거한 농민·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율 제고 (하우스·멀칭 비닐 20원/kg, 폐농약병 100원/개, 폐농약봉지 80원/개)
 - 환경공단·지자체 수거주기 단축(주 1회→4회), **일간 운영실적 보고** 시행
 - ※ 수거 부진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
 - 반사필름* 등 수거보상금 비대상 영농폐기물과 기타 폐기물 병행 수거
 - * 과수원 등에서 햇빛 반사를 위해 바닥에 설치한 PE·PP+알루미늄 소재 필름
 -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농가들의 영농폐기물 배출 독려
- (단속) 지자체별로 점검단을 편성하여 일일순찰 및 기동단속 실시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인력(지자체, 환경공단 위탁 민간수거사업자* 110명) 활용하여 불법소각 감시·단속 강화
 - * 환경공단과 계약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집계크레인 보유 개인사업자